

국민연금, 석달새 5% 이상 보유종목 11조 날렸다

작년 294곳 지분율 5% 이상 보유 삼성전자 등 IT 11종 지분 늘리고 와이엠씨·코텍 등 신규 대량 편입 대한유화 등 108종목 지분율 낮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정보기술(IT)·반도체 관련주를 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량보유한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저조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분율 5% 이상(보통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모두 294개였다.

이 가운데 작년 4분기 중 보유지분을

CB)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신규편입 7.23%) 등 IT 부품 및 하드웨어 관련 업종에서 모두 11개 종목의 지분을 늘렸다.

5% 이상 대량보유 종목 중에서는 신규 편입된 와이엠씨(6.20%), 실리콘웍스(5.11%), 코텍(5.02%), 서울반도체(5.05%→7.11%) 등 디스플레이 및 부품 업종에서 4개 종목의 지분을 늘렸다.

원익머트리얼즈(6.66%→8.80%), 케이씨텍(7.58%→8.62%), 덕산하이메탈(11.05→11.91%), 텔레칩스(11.77%→12.51%) 등 반도체 관련 장비·소재 업종에서도 4개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는 셀트리온(5.04%)과 한올바이오(5.04%)가 대량 보유 종목에 새로 편입됐다. 동아에스

티(12.60→13.10%), 종근당(11.43%→11.82%), 동아쏘시오홀딩스(13.25→13.47%) 등은 더 담았다.

반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율을 낮춘 종목은 108개였다. 이 중 20개 종목은 지분이 5% 아래로 내려가 대량 보유주식 명단에서 제외됐다.

업종별로는 화학(11개)과 식품(9개), 제약(9개), 기계(7개), 미디어(7개) 종목을 주로 매도했다.

화학업종의 경우 작년 3분기부터 지분을 줄여왔다. 4분기에는 대한유화(11.58→8.97%), 송원산업(8.55→6.01%), 롯데정밀화학(12.26%→9.97%), 한화케미칼(8.15→7.09%) 등이 줄었다.

식품업종에서는 CJ프레시웨이

(13.31→8.79%), 신세계푸드(13.10→8.59%), 동원산업(9.14→5.72%) 등을 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과 함께 LG화학(8.72→9.74%), 한국전력(6.21%→7.19%)의 지분을 늘린 반면 포스코(11.05→10.72%) 주식은 줄었다.

한편 국민연금이 대량보유한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저조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종목의 주식 평가액은 약 102조2427억원(이달 9일 종가 기준)으로, 3분기 말 기준 대량보유 종목 평가액(113조3856억원)보다 11조 1429억원(9.83%)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안병희 변호사

“서울회, 이번에도 분열 조짐 적대관계 없는 유일한 후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7일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기호 3번 안병희 변호사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이 감사 경합을 살려 줄줄이 새는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으로 나뉜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적임자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9일 오후 6시, 서초동 캠프에서 안 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를 들어봤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현재 서울회 상황은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반쪽짜리 집행부’가 돼 있다. 양 극단 중 어느 한 쪽의 지지를 받는 집행부는 다른 쪽 회원을 외면한다. 회원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지난 6~7년 동안 출신을 기반으로 지지자가 나뉘어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지금은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모든 회원을 위한 집행부를 만들어야 한다. 로스쿨이든 사법시험 출신이든 특별히 적대관계를 두지 않은 후보는 내가 유일하다. 나아말로 회원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다.”

서울회와 변협에서 모두 감사를 해 보니, 입법지원과 국제교류 등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했다. 서울회장이 당연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아 일사분란한 지역수호 투쟁도 전개하겠다.”

-지역수호 방법으로 밖으로는 변호사법 개정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배출을 줄이자고 했다. 방법은 로스쿨 통폐합인가.

“그건 아니다.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10년간 사법시험을 존치했듯이,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유사직역도 단계적 통폐합 절차를 진행해 직역과 관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직역이 추진하는 소송대리권을 막아야 한다. 변호사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

계조항으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기존 특허·세무·채권추심·등기경매·노무 외에도 성년후견·중재·스포츠엔터테인먼트 변호사회도 창립해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도록 지원하겠다.”

입법지원 등 중폭 ‘예산낭비’ ‘지역수호’로 투쟁 전개할 것

국민에 변호사 접근권 보장 회원에 수임·광고기회 줄 것

-변호사와 의뢰인 중개 플랫폼인 ‘서로톡’ 앱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점과 개발·관리비 규모는.

“국민에게는 변호사 접근권을 보장하고, 회원에게는 사건 수임과 자기 광고 기회를 늘리려고 한다. 기존 중개업체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연결 플랫폼만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얻는다. 중개업체가 변호사 시장의 이윤을 상당부분 가져가, 변호사가 종속될 가능성이 초래됐다. 서로톡은 단기적으로 법조브로커 근절에 앞장서고, 장기적으로 변호사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 비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

-세 후보 모두 공익의무 축소를 내세운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

할 때 적정성은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3·3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개업 3년 차 변호사가 3년간 하면 된다는 뜻이다. 국비로 운영되던 사법연수원 시절과 달리, 자비로 졸업하는 로스쿨이 도입됐다. 다만 변호사는 인권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직무다. (상급단체인) 대한변협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선거기구 등에 영향력을 가진다. 어떤 민간이익단체도 못 가진 등록권과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수준을 3·3으로 하고 20대 로펌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적극 권장하겠다.”

-실무 수습 변호사의 지도담당 변호사를 추진하고, 급어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많은 청년 변호사가 6개월 실무수습 때 100만원대 월급을 받으며 조사원 이상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담당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하면 자기 명의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변론 업무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중사기관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쳐우도 개선될 것이다. 실무연수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월급 적정액 250만원~300만원을 유도하겠다. 지도담당 변호사 입법은 용이하다. 실무수습제 폐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안병희 변호사는...

-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 군법무관
- ▲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 ▲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 ▲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 ▲ 대한변호사회협회 감사

‘관세법 위반’ 벌금 145억 BMW “법적 대응할 것”

인증절차 위반 승용차 2.9만대 수입 전·현직 임직원 6명 징역형 10월 등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하며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징역 10개월, 엄모 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구속됐다. BMW 직원 심모 씨는 징역 4개월, 이모 씨와 강모 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1년 동안 형 집행이 유예됐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향후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직원 김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벤츠코리아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리콜사태’를 일으켰던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차량 결함은 아니지만, 축소 및 녹장리콜로 결함을 내리면서 BMW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CT·MRI 판독 더 정확해진다

보건복지부, 7월 품질관리기준 강화 전신 촬영용 MRI ‘몸통 영상’ 추가

오는 7월부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는 7월 10일 부터 CT와 MRI의 영상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촬영 단층면 간격이 이전보다 촘촘해진다. MRI 검사 시 절편(section) 간격은 기존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조정된다. 촬영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의료진 판독이 정확해질 수 있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 촬영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촬영 유형은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기로 했다. 조영제 부작용 우려로 일선 의원과 검진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상황에 맞게 조영제 사용 여부를 선택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조영제는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할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낮은 비효율이지만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신 촬영용 MRI의 제출 영상 목록에는 ‘몸통 영상’이 추가된다.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10월 부터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유방 촬영용 장치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 등을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이세경 기자 sellee@